신용카드 지출 늘었는데…음식·숙박업 부진 여전

통계청, 이달 셋째주(9~15일) '광주·전남 가계지출 변동률'

거리두기 해제 소비 심리 높아져…모든 연령대서 지출 증가

의류·신발 업종 25% 넘게 증가…숙박업은 30% 이상 감소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한 광주 신용카드 지출이 올 들어 이달 처음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높아지면서 지난주 광주시민들의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지급서비스 충전액은 2020년 1월 평균보다 57.6% 뛰었다.

27일 통계청이 신한카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집계한 '지역별 가계지출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이달 9~15일 일주일 동안 광주지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지난 2020년 1월 일주일 평균보다 26.1%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24.1%였으며, 대구가 3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32.9%), 세종(30.7%), 충남(29.4%), 울산(27.7%), 경남(27.5%), 광주(26.1%), 경북(25.1%), 전북(25.0%), 서울(23.8%), 경기(22.7%), 전남(22.5%), 대전(22.2%), 제주(21.4%), 강원(20.6%), 충북(20.5%), 인천(15.5%) 등 순으로 높았다.

이달 셋째 주(9~15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하기 전인 2020년 1월 일주일 평균과 비교해보면 광주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가계지출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60대 가계지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이 기간과 2020년 1월을 비교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50대가 52.1%로 가장 높았다.

60대가 41.1%로 뒤를 이었고, 70대 이상 30.0%, 40대 20.0%, 30대 14.1%, 20대 이하 3.5%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광주 지역민들의 카드 지출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기승을 부린 2월 첫째 주(1월29일~2월4일) 24.2% 급감했지만 이후 코로나19의 풍토병화(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이달 셋째 주 광주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카드 지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지만 주요 업종 가운데 의류·신발 부문만 25.6% 증가했고, 음식·음료 서비스(-7.8%)와 숙박(-32.8%) 등의 부진은 여전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동안 의류·신발 카드 지출은 27.6% 늘고, 음식·음료 서비스(-3.6%)와 숙박(-11.9%) 부문은 감소했다.

한편 개인 은행계좌이체를 통한 국내 대형 전자지급서비스 충전액(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증가율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1년 7개월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4월16~22일) 광주시민들의 전자지급서비스 충전액은 지난 2020년 1월 평균에 비해 5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충전액은 65.9%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적으로는 58.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충전한 전자지급서비스 금액 증가율(2020년 1월 대비)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1년 7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간편결제와 비대면 소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은 중장년층에서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주 광주시민들의 전자지급서비스 충전액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138.7%, 40대 88.1%, 30대 65.4%, 60대 47.3% , 20대 이하 35.5% 순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전남도민들의 충전액 증가율은 50대 346.3%, 60대 90.8%, 40대 89.3%, 30대 84.7%, 20대 이하 28.6% 등이었다.

이달 15일에는 인원·시간 제한을 모두 없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4월18일~)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3월 등장해 같은 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리두기는 약 2년 1개월, 757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백희준 기자 bhj@

전남농협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성황 27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해남 바나나와 완도 비파, 곡성 블루베리를 생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하며 최대 32% 할인된 가격에 내놓아 일부 품목은 8분 만에 1kg 상자 100개를 완판했다. 〈전남농협 제공〉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된다.

그는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 2차장은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일상회복으로 한발짝 더 가가서고 있다"고 진단하며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위중증 환자수는 546명으로, 지난 2월24일(581명) 이후 62일만에 500명대로 내려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이달 3째주 0.70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달 3째주 전국과 수도권의 위험도는 14주만에 '중간'으로 평가받았다. /연합뉴스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위 민간위원 위촉식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은 2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광주국세청은 기존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9명 이외 8명의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 강화 및 공정·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을 법률·세무·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8명은 향후 2년간 위원회에 참석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국세청은 위촉장 수여 후 자체제작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안내 실무해설 책자를 민간위원에게 배부해 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판식 청장은 "위촉된 위원들이 납세자보호위원으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납세자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종 간담회나 소통행사를 통해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무늬만 건설사' 등 부적격 건설사업자 퇴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현장 단속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부적격 건설사업자 퇴출을 추진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7일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확보를 위해 익산국토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체도 없이 서류만으로 건설사를 등록하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익산국토청과 소속기관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상시 단속 안내문을 함께 게재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시설·장비·기술 인력 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익산국토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색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등록관청(지자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국토청은 호남권 국도건설 및 관리를 위한 다수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이 조성되는 등 건설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캠핑용 구조 변경 차 보험료 최대 40% 할인

캠핑용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의 보험료가 내달부터 최대 40%가량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내달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산출 체계를 이처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구조변경 관련한 규제 완화 흐름에 맞춰 캠핑용 구조변경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리법령 개정 이후 구조변경이 승인된 차량은 이달 기준 1만2200대 정도다.

이에 따라 업무용 승합차를 캠핑을 위해 개인용 승용차로 구조 변경을 한 경우는 내달부터 기존 승합차가 아닌 개인용 승용차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개인용보다 10% 정도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다. 내달부터 개인용으로 적용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인하되는 셈이다.

아울러 승용차를 승용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개인용 승용 캠핑카에 대한 할인 요율을 신설해 적용하게 된다.

캠핑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개인용과 비교해 40% 정도 저렴하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인 '레이'의 경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109만2630원이지만 승용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면 63만3730원으로 42%가량 저렴해진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관납보험료 11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자에게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환율 2년 1개월만에 최고

26일 원·달러 환율이 15원 가까이 급등하며 1260원대 중반에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4.4원 오른 달러당 1265.2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2020년 3월23일(1266.5원) 이후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39.06 (-29.25)
↓	코스닥	896.18 (-14.98)
↑	금리 (국고채 3년)	2.899 (+0.069)
↑	환율 (USD)	1265.20 (+14.40)

농지연금 가입자 2만명 돌파

월평균 지급액 97만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보장제도인 농지연금 가입자가 2만명을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논밭이나 과수원 등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가입자 1만명을 돌파한 이후 4년, 2011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 한 해 광주·전남에서는 신규 가입이 233건 이뤄졌다.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9057억원이며 가입자 월평균 지급액은 97만원이다.

농지연금은 도입 이후 연평균 가입자가 27%씩 느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농어촌공사는 이날 2만 번째 가입자 김광식(64·경기도 가평)씨와 기념 행사를 열었다. 김씨는 전후후박형(前厚後薄型)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원을, 이후부터는 월 164만원을 받는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자신이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담보 농지 가액 6억원 이하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급 전용 계좌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졌고, 저소득층과 장기 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됐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연령 하향, 임대 공고 절차 의무화, 법원 경매 전 공사 매입제도 도입, 경영이양형 상품 출시 등 수급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